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3일, 박수현의원 외 169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6.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현의원)

일본 정부는 2022년 2월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 강제 노역 피해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시마노킨잔’(佐渡島の金山, 일명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였으나, 유네스코는 추천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음.

이에 일본 정부는 2023년 1월 19일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재추진하려고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음.

앞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수많은 한국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23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준비하도록 권고하였음.

이에 일본 대표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고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설명하고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는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가 공언한 후속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발표함.

하지만 2017년 일본 정부가 제출한 이행경과보고서에는 2015년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약속한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빠졌으며,

오히려 2020년 도쿄 소재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물에서 한국인 강제 노역과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들을 전시하였음. 반면 독일 정부는 2001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독일 에센의 출페어라인 탄광 산업단지에 세계대전 중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추모시설까지 건립했음. 이에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음.

그럼에도 2022년 일본 정부는 2015년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약속한 후속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인 강제 노역의 또 다른 피해 현장인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음.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무산되자 2023년 1월에 재신청하였음.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한 근대산업시설은 전쟁 시기 한국인을 비롯한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을 강제 징용하고 가혹한 탄압이 있었던 식민지배와 전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세계유산으로 미화될 수 없음. 사도 광산도 전쟁물자 확보시설로 한국인 1,000여 명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곳임.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유산으로 보존하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재신청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과 등재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또한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유네스코의 권고와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아울러 우리 정부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유네스코에도 국제사회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동 결의안은 우리 국회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하고, 일본의 등재 근대산업시설 관련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먼저, 군함도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2015년 7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개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interpretive strategy)을 마련¹⁾하는 등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2017년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일본정부가 2017년 및 2019년에 제출하였던 이행보고서와 2020년 12월에 제출하였던 해석전략 이행보고서에는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 및 관련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일본정부가 도쿄에 설치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음.

이에 2021년 7월 개최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의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네스코(UNESCO)-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²⁾)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³⁾을

1)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서 일본정부가 유산에 대한 해석 전략을 마련할 때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일본 대표는 ①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②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함.

충분히 참고하여 일본이 이행보고서를 2022년 12월까지 제출하여 2023년에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결정문이 채택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2022년 12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⁴⁾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일본정부의 후속조치 이행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겠음.

이에 2023년 9월 개최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관련 당사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독려하고, 유산 해석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증언을 포함한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하며, 일본측에 관련 당사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여 유산 해석전략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사항을 마련하여 2024년 12월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2)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기념물과 유적의 보존과 보호에 관한 업무에 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로 전 세계의 역사적 기념물과 유적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전문가 NGO 조직, 1965년 창립되었음.

3) ① 각 시설의 1910년대 이후를 포함한 전체 역사 기술이 불충분 ②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조치 불충분 ③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 부재 ④ 1910년 이후 전체 역사 해석 전략 관련 국제 모범사례에 비추어 미흡 ⑤ 한일 양국간 대화 지속 필요

4) ①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 ② 정보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경과 및 주요내용]

일자	경과	주요내용
2015. 7. 제39차 세계유산 위원회 (WHC)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개소 세계유산 등재 결정	-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 마련을 권고함. - 일본 대표는 ①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②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발언함.
2017. 12.	일본, 이행보고서 제출	- 1940년대 한국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노역’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 - 수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일본 산업을 지원’하였다고 언급됨. -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의 목적이 ‘강제노역 희생자 기념’이 아닌 ‘산업유산 보존을 위한 보급과 이해에 기여’로 변경됨.
2018. 6. 제42차 세계유산 위원회	일본의 이행보고서 점검 및 결정문 채택	- 일본 대표의 발언을 포함한 2015년도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 관련 당사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권장함. -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독려함.
2019. 12.	일본, 이행보고서 제출	- 일본의 해석전략은 2017년 이행보고서 첨부문서로 기재출했다는 입장 표명하고, 종합적 해석은 산업유산정보센터 완공 시점으로 발표를 보류함. - 해당 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지속적 대화의 대상으로 ‘일본 관계부처, 지방정부, 유산소유자, 관리인 및 지역사회’를 언급하여 대한민국을 대화 관련 당사국에 포함하지 않음.
2020. 6.	일본정부, 도쿄소재 산업유산정보센터 일반공개	-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의 증언 및 자료를 전시함. - 전시 내용에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음.
2020.12.	일본, 세계유산센터에 해석전략 이행보고서 제출	- 일본은 정보센터 완공 시 해석전략에 대한 이행 현황을 종합 보고하라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석전략 이행보고서를 제출함. - 동 보고서는 도쿄 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및 등재 당시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약속한 후속 조치 및 관련 결정의 구체 이행 근거 미포함.

일자	경과	주요내용
2021. 7. 제44차 세계유산 위원회 (WHC)	세계유산위원회, 일본의 이행보고서 점검 및 결정문 채택	- 2021년 6월 유네스코-ICOMOS 공동조사단의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점검 활동 환영 - 일본이 약속한 몇 가지 사항 및 위원회 관련 결정을 이행한 것에 대해 만족을 표명함. - 그러나, 일본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함. - 이에, 일본이 관련 결정을 이행함에 있어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할 것을 요청함. - 일본이 업데이트된 보존현황보고서 및 상기 이행사항을 2022.12.1.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함.
2022.12.	일본, 이행보고서 제출	- 일본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행보고서 제출함. -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여전히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음. - 약속한 후속조치 및 관련 결정의 구체적인 이행이 미흡함.
2023. 9. 제45차 세계유산 위원회 (WHC)	세계유산위원회, 일본의 이행보고서 점검 및 결정문 채택	- 당사국이 관련 당사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독려하고, 유산 해석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증언을 포함한 추가 연구, 데이터 수집, 검증 작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함. - 유산해석 전략과 관련하여 향후 취할 수 있는 신규 대책방안을 세계유산센터에 알릴 것 - 관련 당사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여 유산 해석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사항을 2024.12.1.까지 업데이트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 재구성

다음, 사도 광산과 관련해서는, 1950년 일본 니가타 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에서 확인된 바, 전시 중 1,1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⁵⁾되어 있는 사도 광산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세계

5) 2019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니가타 노동기준국 공문서를 근거로 전시 중 최대 1,2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유산 등재 추진을 결정하고, 2022년 2월 유네스코에 ‘사도섬의 금산’ 세계 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세계유산 등재 대상시기를 에도시대(1603~1868년)로 한정하여 조선인 등의 강제동원 사실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임.

동 신청은 2022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시행한 등재신청서 형식 완성도 검사(completeness of the nominations)에서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2023년 1월 일본정부는 신청서를 보완하여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를 위하여 다시 제출하였음.

이에 대하여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ICOMOS는 1년여 기간 동안 데스크심사, 현장실사 및 패널심사⁶⁾를 실시한 후 일본의 사도 광산 등재 신청에 대한 평가를 ‘보류’로 결정(2024.6.8.)한 바 있고⁷⁾, 세계유산 등재 판정은 금년도 7월 말에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7.21.~7.31.)의 심의 시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 미쓰비시(三菱) 광업(주) 사도(佐渡) 광산을 중심으로」, 2019

6) ICOMOS는 각국의 세계유산신청서에 대하여 ICOSMOS 국제전문가위원회, 관련전문기관들, ICOMOS 국내위원회, 관련 전문가들의 서면검토, 현지실사 및 패널회의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세계유산위원회에 이를 제출함.

7) ICOMOS는 사도 광산의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광산 채굴 기간에 걸쳐 신청 유산의 전체역사를 보여주는 해석설명의 전략 및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였음.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추진 경과]

일자	경과	주요내용
2010.10.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금을 중심으로 하는 사도 광산의 유산군’ 으로 명칭 변경하여 잠정목록 등재
2022.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사도섬의 금산’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 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2022. 7.	등재신청서 형식 완성도 검사(completeness of the nominations) 미통과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시행한 등재신청 서 형식 완성도 검사(completeness of the nominations)에서 신청서 미통과 - 제출국으로 반려된 사실이 일본 언론에 의해 보도 개시
2022. 9.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초안) 제출	- ‘사도섬의 금산’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초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2023.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재제출	- ‘사도섬의 금산’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재제출
2023. 3.	등재신청서 완성도 검사 통과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시행한 등재신청서 형식 완성도 검사 통과
2023. 3.~ 2024. 5.	유네스코 자문기구 ICOMOS(이코모스)의 등재신청서 심사	- 데스크리뷰 및 현장실사(’23.8월) - 이코모스 패널심사
2024. 6.	유네스코 자문기구 ICOMOS 등재신청서 평가결과 공개	- 평가 결과 보류(R), 에도시대만이 아닌 전 시기를 아우르는 유산의 전체역사를 명확 하게 설명하고 사도 광산 현장에 전시시설 을 설치해야 함. ※ 올해 세계유산위원회 심의(7.21.~7.31.)시 등재 여부 결정 또는 내년 2월 1일까지 추가정보를 제출하여 세계유산위원회 심의(’25.7월)

※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 재구성

동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국회의 ①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 요구⁸⁾, ②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등재 관련 유네스코 결정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⁹⁾, ③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증언과 자료 반영 및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릴 것 촉구¹⁰⁾, ④ 일본정부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불이행시 유네스코에 대한 사도 광산 등재거부 적극 검토 요구¹¹⁾ 등의 내용임.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 탄광 등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결정한 이후, 일본정부가 동 위원회의 권고와 후속조치에 따른 한국인 강제동원 사실에 대한 설명과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2022년 일본정부는 주요 시설이 근대시대에 형성된 사도 광산을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 제외를 위해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1603~1868)로 한정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등재의 기본원칙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¹²⁾의 시기를 자의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

8) (결의안 주문)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9) (결의안 주문) 2.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 한다.

10) (결의안 주문)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 그리고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수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가혹한 조건하에서의 강제 노역 증언과 자료를 반영하고,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1) (결의안 주문) 4.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과 충실한 이행 촉구 결정문을 낸 것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거부할 시 사도 광산 등재 거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유네스코에 요구한다.

12)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인류에게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OUV :

유산은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유지해야 하는 기념물, 유적, 건물 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세계유산협약(1972년)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겠고,

또한,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발생하고 있는 후속조치 및 불이행 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쟁이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¹³⁾

따라서 일본정부가 등재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유네스코의 권고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후속조치 이행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의 동 결의안은 그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봄.¹⁴⁾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녀야 함.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함.

13)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사도 광산 등재 추진에 대응하고자 외교부 총괄 하에 2022년에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작업반(TF)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2023년 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체로 개편하였음.

14) 대한민국 국회는 2020년 12월, 2021년 9월, 2022년 2월, 2023년 2월 네 차례에 걸쳐서 각각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각각 의결하여,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정부가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본의 한 언론은 한국의 현 정부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태도가 변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 국민에게 사실을 오도(誤導)하여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2022년 2월 1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시마노킨잔’(佐渡島の金山, 일명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면서 일본의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는 시기를 에도시대(1603~1868)로만 한정하여 에도시대 이후 발생한 강제징용 등의 역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일본 정부는 니가타(新潟)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에서 최소 1,140명의 한국인 강제노동을 확인했고, 우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 발간한 자료에서도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을 하고 있음.

2015년 7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인 수만 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하시마(군함도) 탄광, 미이케 탄광, 다카시마 탄광, 야하타 제철소, 미쓰비시 조선소 내 3개 시설 등 7개 시설을 포함한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23개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understanding of the full history of each site) 할 수 있는 해석전략(interpretive strategy)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일본 대표는 동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발언하였고 이는 결정문의 일부로 포함되었음.

그러나 2017년 12월 일본은 2015년 등재 당시 일본 대표의 발언과는 달리 한국인 등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가혹한 조건하에서의 강제노동 동원 사실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등이 빠진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결정문의 충실한 이행과 관련 당사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강력히 권고함.

하지만 2019년 12월 일본 정부는 다시금 2015년 등재 당시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 이행 내용을 제외한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당사국과의 대화 권고를 국내 이해당사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주

요 당사국인 한국을 대화 상대에서 배제하는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며, 2020년 6월 15일 일본 정부가 일만에 공개한 도쿄 소재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서도 2015년 7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와는 정반대로 한국인 강제노동과 민족차별을 부정하는 내용의 증언과 자료들만을 전시하는 등 전시 내용에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음.

이에 2021년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인과 연합군 포로 등에 대한 강제노동이 있었던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의 유네스코 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음.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저해됨을 인지하고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존중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일본 메이지 근

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 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 그리고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수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가혹한 조건하에서의 강제 노역 증언과 자료를 반영하고,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과 충실한 이행 촉구 결정문을 낸 것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거부할 시 사도 광산 등재 거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유네스코에 요구한다.

제안이유

일본 정부는 2022년 2월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 강제 노역 피해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시마노킨잔’(佐渡島の金山, 일명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였으나, 유네스코는 추천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음.

이에 일본 정부는 2023년 1월 19일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재추진하려고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음.

앞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수많은 한국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23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준비하도록 권고하였음.

이에 일본 대표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고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설명하고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는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가 공언한 후속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발표함.

하지만 2017년 일본 정부가 제출한 이행경과보고서에는 2015년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약속한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빠졌

으며, 오히려 2020년 도쿄 소재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물에서 한국인 강제 노역과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들을 전시하였음. 반면 독일 정부는 2001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독일 에센의 출페어라인 탄광 산업단지에 세계대전 중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추모시설까지 건립했음. 이에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음.

그럼에도 2022년 일본 정부는 2015년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약속한 후속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인 강제 노역의 또 다른 피해 현장인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음.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무산되자 2023년 1월에 재신청하였음.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한 근대산업시설은 전쟁 시기 한국인을 비롯한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을 강제 징용하고 가혹한 탄압이 있었던 식민지배와 전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세계유산으로 미화될 수 없음. 사도 광산도 전쟁물자 확보시설로 한국인 1,000여 명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곳임.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유산으로 보존하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재신청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과 등재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또한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유네스코의 권고와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아울러 우리 정부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유네스코에도 국제사회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함.